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김우성



대선을 꼭 49일 앞왔다. 선거가 코앞인 데도 국민의 관심도는 냉랭하다. 정치권·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차기 국정을 책임 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답답지 않은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친인척, 측근 비리로 MB정권의 레임덕은 여느 정권보다 빨리 왔다. 정치권 역시 여야간 불평사나운 정쟁과 비리로 국민의 실망만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게다가 후보들마저 정책 대결보다 외부인사 영입과 정쟁에 날이 새고 있다. 암울한 시대, 도무지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랴고 보이지 않는다.

### 정치 불신에 대선 관심 뒷전

그래서일까. 요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국민을 열광시키고 있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오히려 이런 오락물에 심취해 있는 듯하다.

1천만 관객 돌파 흥행몰이 속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해'에 대한 국민적 열광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비록 영화 이긴 하지만 아마도 현 정치권과 대선 후

보들에서 보지 못한 희망과 감동의 정치 불을 수 있다는 입소문 탓일 게다.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 그처럼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이도 드물다. '광해'는 독살 위협을 느낀 광해군의 지시로 대신 왕 역할을 하게 된 천민 하선이 조세정책인

## 12월, 국민은 '광해스타일'을 찾는데

대통령과 대명 사대정책 등을 놓고 중심들과 맞서는 모습을 그린 영화다.

진짜 왕 광해와 가짜 왕 하선의 행동을 대비해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 우선 하선의 인간미에 끌려 독약을 대신 마신 궁녀 사월의 충성심이 돋보인다. 또 가짜로 확신, 하선을 죽이려다 중전의 질책에 자결을 시도한 도부장을 "니가 살아야 내가 사는데 왜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는 하선의 꾸짖음에서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한, 기득권층 부조리를 감싸며 대통령을 반대하는 중신들을 향해 "내 나라 내 백성이 험겍고 죽임을 당하는데 허울이

뽀나. 이리다 보니 후보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명 의식이나 철학,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된 자신만의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다. 박정희 향수의 민심, 노무현 향수의 민심, 그리고 정당정치 불신의 민심에 기반 얼굴에 소명 의식이 배어 있을 리 만무하다.

### 국민 하늘처럼 섬길 준비를

우리는 지금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성장률은 2%대를 예상할 만큼 저성장이고 악화되는 현실이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해 벌이는 힘겨루기로 한일, 한중, 중일간 등 동아시아에서 마찰음이 부쩍 높아졌다. 대한민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후보들이 국정철학을 제시하고 정책 대결을 벌이기는커녕 교과서적 원론만 늘어놓고 있다. 국민이 대선에 관심을 갖기보다 '광해', '강남스타일' 등 오락물에 열광하며 그곳에서 이상적 지도자를 찾는 이이다.

지금 후보들에게 권하고 싶다. '광해'를 한번이라도 더 관람하며 '진정 국가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라고. 그래야만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의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12월 대선, 국민은 '광해스타일'을 찾고 있는데 후보들은 과연 그럴 준비가 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편지부국장〉 wskim@kwangju.co.kr

## 시설

### 광주 어등산 테마파크 '썩수표'는 안 된다

광주시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어등산골프장 우선 개장'을 허락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약속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각종 행정절차 등에 막혀 자질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주)어등산리조트 측은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해 기부하기로 했던 테마파크 사업을 광주시가 맡게되면서 현재로서는 기한 내 완공은커녕 강연대 시장의 임기 내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안이 내려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기부 토지를 시가 직접 받들지, 광주도시공사가 받을 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부지를 기부받으면 사업시행자인 만큼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기부금에 대한 30%의 증여세를 내야함에 따라 세금 90억 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자치단체인 광주시가 넘겨 받을 경우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는 만큼 도시공사와 부지에 대한 재계약 및 위탁 관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기부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데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용역 발주와 정부 부처 협의 등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 접착산중이다.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절차 상 테마파크 완공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수용한 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민의 반발과 시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강연대 시장이 골프장만의 개장을 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부지를 기부받으면 사업시행자인 만큼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기부금에 대한 30%의 증여세를 내야함에 따라 세금 90억 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민들 역시 더 이상 함구로 일관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도 호남 소외라니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된 정부 지원에서도 호남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국회 '태안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로 충남 6곳 뿐 아니라, 영광, 무안 등 전남지역 3곳과 군산, 부안 등 전북지역 2곳이 특별피해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1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중심의 26개 사업에 대해 총 5523억 원을 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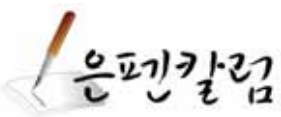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충남지역 6개 시·군에 집중됐고 전남 3곳에는 전체의 6%인 330억 원, 전북에는 0.02%에 불과한 1억 원만이 지원됐다고 한다. 수천억 원 가운데 10%도 안 된다니 어안이 없을 따름이다.

더욱이 비(非) SOC를 중심으로 총 27개 사업에 322억 원이 투입된 2차 지

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전남의 피해 지역 3곳에는 지원까지 단 한푼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 주민들의 복구의지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정부의 호남 소외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점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태안 유류피해 관련 1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1200억 원이 편성돼 있을 뿐 전북지역에는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고, 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는 전남지역 예산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만약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에서조차 소외된다면 호남지역의 피해 주민은 삼성으로부터 죽고, 정부로부터 또 한번 죽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지역별로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시·군의 피해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서해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두번 울려서야 되겠는가.



### 단일화, 호남 민주개혁진영의 역할은



최영태

역사학자 카(E. H. Carr)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위대한 인물이란 특출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사회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또한 "위대한 인물은 항상 현존하는 세력의 대표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가 그 창조를 돕는 세력의 대표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인 문재인은 민주당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대표하고 있는 전통적인 민주 개혁세력의 대표자이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안철수는 기존의 정당들과 정치질서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제3세력의 대표이지만 "현 집권세력이 한국사회에서 그

어떤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민주개혁진영에 발을 담았다.

정권교체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 아니라 세력교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이념과 지향점이 비슷한 두 세력의 결합은 매우 자연스럽다. 민주주의의 공고화, 복지정책 확대, 지역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협력·통일 등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좋은 사회 건설을 위해 야권 후보의 단일화와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승리가 불가능한 정치현실, 양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단일화 열망,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치역정과 인생관 등을 고려할 때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이왕 단일화를 하려면 좀 더 품격있게, 그리고 단일화의 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들끼리 마감을 직전에 베풀 겸 협상이나 단순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화를 도모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일화는 양 진영이 사전에 각각 집권 후 실천할 최소한의 로드맵을 제시한 후 함께 토론하면서 공통분모를 찾고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한 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체신에 대한 진정성은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측이 더 적극적이고 또 어떤 측의 안이 좀 더 현실적인지에 따라 판가를 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호남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선거나 단일화 과정에서 호남인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양 진영 혹은 서울의 움직임만 쳐다보고 있지 말자. 1987년 6월 항쟁 때의 민주회복국민회의처럼 한시적으로나마 단일화를 견인해 내기 위해 호남 지역 민주 개혁진영을 총 망라한 단일화 추진 조직을 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자. 그 순서로 먼

저 문제이나 안철수 진영에 참여하지 않은 중립 세력이 중심축을 형성해 보자. 다음으로 문재인과 안철수 진영 중 어느 한 쪽에 참여했거나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진보정당 사람들과 민노총도 야권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념적으로 보수적 인사들도 대부분 민주개혁진영의 집권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그들도 가능한 많이 참여하게 한다.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문재인과 민주당 측에는 정치체신과 기독교 포기 부분에서 더 진전된 안을 내놓도록 촉구해야 한다. 안철수 측에도 정치체신과 정당정치가 양립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도록 촉구해야 한다.

다수의 대중들이 행동으로 단일화를 촉구하고 압박하는 일은 호남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진영의 이익이 아닌 대중단결의 자세로 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전남대 교수·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기고



장문성

최근 언론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인 GMO의 일부 품종이 생명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강 대학 세라라니 교수 연구팀은 쥐를 암수 10마리씩 10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암수 각각 한 그룹에겐만 정상적인 음식과 물을 주고 나머지 그룹에게는 미국 몬산토사의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먹이거나 이 옥수수가 내성을 갖고 있는 몬산토사의 제초제를 물에 희석해 조금씩 먹게 했다. 그 결과 옥수수와 제초제 모두 문제를 일으켰으며 특히 암컷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었다.

14개월쯤 자랐을 때까지 정상 그룹에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데 비해 유전자변형 옥수수나 제초제를 먹은 그룹의 암컷 쥐 가운데 10~30%에서서 종양이 발견되었다.

24개월이 됐을 때는 정상 그룹 암컷의 종양 발생 비율이 30% 수준이었으나 유전자

변형 옥수수 등을 먹인 그룹에선 그 비율이 50~80%로 높아졌고, 종양 크기도 정상 그룹보다 2~3배 정도 컸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하여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식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콩·옥수수·면화·유채·사탕무 등 5개 작물로, 수입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콩과 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콩과 옥수수 자급률이 1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콩과 옥수수 제품의 대부분이 수입산인 것이다.

또한 수입 콩의 71.4%, 옥수수의 48.9%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기 때문에 수입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절반

이상이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제조·가공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어디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는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물론 시중에 유통되는 콩과 옥수수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제조·가공한 식품일지라도 제조·가공 중에 유전자재조합 DNA가 분해되어 남아 있지 않거나 검사가 불가능한 간장, 식용유, 당류 등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콩과 옥수수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GMO에 대한 관대한 표시제도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변형농산물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 無等鼓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이면 썩는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특히, 몇몇 인물이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 또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가의 재산이 무려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원 총리의 부인과 자녀·동생·어머니 등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최소 27억 달러(약 2조 959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원 총리는 즉각 부인했지만 올해 90세인 원 총리의 어머니 양즈원은 평안보협 주식 1억2000만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동생 원자홍

은 2억 달러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또, 부인 장페이라는 국유기업인 베이징다이하드보석 회장이며, 아들인 원원송은 국유기업인 중국위성통신그룹(CSC) 회장을 맡고 있다.

이게 앞서 지난 8월에는 '캘리셔에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힘들게 일한다.'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제

로써 황제처럼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러시아 야당인 국민자유당 공동의장 보리스 넬초프가 발표한 '캘리셔 노예의 생활'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은 연봉이 11만 5000달러(1억3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그가 갖는 특전은 요트 4척과 집 20채, 헬기·비행기 58대, 고급 시계 11개, 자동차 700대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재임 시절 촉재한 비자금에 들뜬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한 해 우리의 대통령이었다. 전 씨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진 이후 유가족인 박근혜씨를 청와대로

불러 "박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 생계비로 쓰시라."라며 6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시세로는 무려 2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아무런 세월이 흘렀더라도 그 돈의 출처와 용처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건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